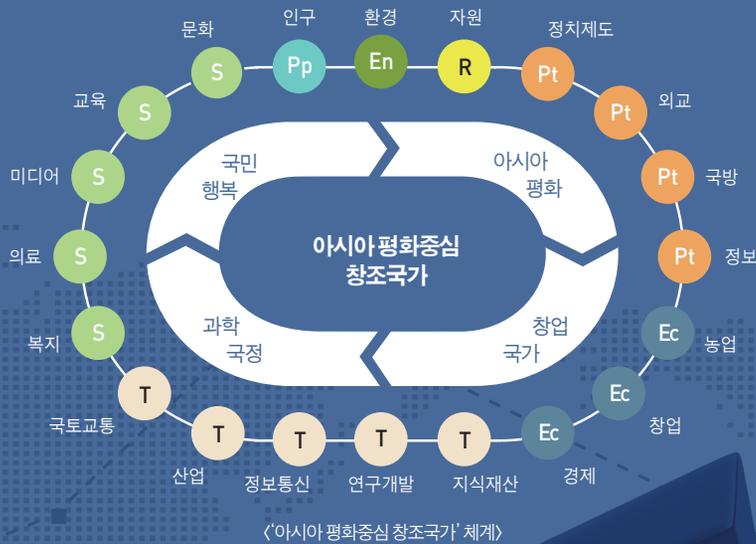


# 21세기 선비 정신으로 30년 뒤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다

문술리포트 공청회 스케치

취재 · 정리 임화진 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 이제원 연구원



**분류**  
 사회(S),  
 기술(T),  
 환경(En),  
 인구(Pp),  
 정치(Pt),  
 경제(Ec),  
 자원(R)

우리나라 선조들의 선비정신은 나라를 길게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조선이 5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돈도 권력도 없기에 두려울 것이 없는 선비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의와 백성을 대변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과 갈등해결, 평화통일, 지속성장과 번영,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등 해결해야 할 난제를 여럿 안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 운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경제, 녹색경제, 창조경제 등으로 변경되는 상황이다. 국가 장기전략보고서에 일관성이 없는 주된 이유는 정부 주도로, 또는 정출연의 주도로 작성하였고, 이들은 정권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의 미래 비전은 이권의 개입 없이 21세기의 선비정신을 가지고 세워져야 하며, 문술리포트가 그 길을 열고 있다.

## 4대 전략

미래전략은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문술리포트에서 미래의 대상시간은 30년으로,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미래전략은 다름 아닌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술리포트가 제시하는 2045년의 국가미래 비전은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다. 이 비전을 바탕으로 백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 크게 네 가지의 대전략을 수립했다. 첫째는 국민행복 대전략으로, 국민의 행복은 국가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둘째는 아시아 평화 대전략이다. 분단국가로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합리성을 강조해 국가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과학국정 대전략이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벤처를 육성하는 창업국가 대전략이 있다. 문술리포트 공청회에서는 4대전략 중에서 과학국정, 그리고 세부전략 중에서 각 분야 전략을 하나씩 대표로 다루었다.

## 곽재원

KAIST 이사



### 과학국정 대전략

왜 지금 미래전략을 논하는 것일까? 세기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실제 세기가 시작하고 10년이 지나야 새로운 세기가 열린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전 세기에 가지고 있던 양극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세기는 싸움으로부터 격렬하게 시작되었고 공업을 중심으로 했던 산업혁명 세기였다.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제 3차 산업은 2차 산업의 연장선으로, 전 세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올해나 내년쯤 비로소 시작되는 21세기는 퀀텀 점프(quantum jump), 즉 문명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는 과학기술 중심국가, 과학 강국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됐다. 지금까지는 일관성 있게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정책이 과학을 밀어주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정책으로 과학기술을 국가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국정 전반에 기여하고, 증거를 남기며 국가를 지원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올해 예산 357조 원 중에서 17조 원만 정부 R&D 예산이고, 나머지는 보건복지, 교육, 국방 등에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재난재해와 글로벌 이슈,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중에서 11조만이 배정되었다. 과학기술은 미래를 담보하는 국가예산이기에, 나홀로 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전 사회에 침투되는 국가 비전에 맞추는 전략을 짜야 한다. 전문성 강화 중심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경제·안보·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이 국가의 기술정책을 스마트하게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 문화전략

사회 분야를 대표해 발표된 문화전략은, 우리가 코스모폴리탄으로서 세계 속에서 다른 민족과 공존해 나가며 문화를 융성해 나아가야 한다 메시지를 전했다.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작지만 화려한 미국'이었다. 서양문화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서구의 문화를 고급문화나 하위문화 구분할 것 없이 받아들였다. 우리도 서양인들처럼 영화를 만들고, 일본 차트를 휩쓰는 가요를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우리가 서양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 서양 문화에 편승해서 창작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만의 문화나 정신으로 문화를 이끌고 있지는 않다. 전 세계의 콩쿠르를 휩쓸지만 독창적인 작곡이나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독창적인 예술가나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가는 과학 같은 다른 분야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비해 적다. 모방을 통해 제작 솜씨(craftsmanship)를 키웠으니, 앞으로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를 발휘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문화전략이 국민행복전략과 맞닿아 있는지도 늘 확인해야 한다. 여태껏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더 이상은 성장이 행복을 담보하지 않게 된다. 미래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행복, 국민 삶의 질, 그리고 다양성의 확보다. 정부는 경제성장 중심에서 행복사회로 이행해 나가는 데 문화가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일터에서 여가시간이 만들어져야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문화를 즐기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중요하고 요소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하고 예술가들의 창의적 결과물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에도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 인간이란 자신들의 것에 대한 과도한 애정을 쏟도록 디자인 되어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열린 태도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만 얻을 수 있다. 또, 고령화 시대는 문화의 주체를 바꿀 수도, 양극화시킬 수도 있는 변수다. 소득 또한 문화를 양극화시킬 수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부의 역할이다.

## 임춘택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 과학국정 대전략

기술분야를 대표해 발표된 산업전략은, IT 융합형 'MESIA(Medical-bio, Energy-environment, Safety, Intellectual service, Aerospace)' 쌍두마차 전략으로 축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핀란드, 중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이다. 지난 50년 간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시작해 산업을 육성해 오면서 지금은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전자 등 현대문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5대 기간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산업들은 이미 성숙단계(S-Curve)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산업은 10여년 전 황우석 사기사건 등으로 정체된 상태이며, IT 분야는 안정적이지만 인젠가는 성숙단계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산업은 30년 정도 육성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성숙한 산업과, 현재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나누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1등의 전략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유행에 따라 단기필마(單騎匹馬) 형의 개척자 전략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의 모든 산업을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에 맞춰 1등을 추구하는 개척자 전략을 적용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되는 분야가 많다. 현재 한국이 일본, 독일과 더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5대 기간산업인 전자, 기계, 조선·해양, 석유·화학·철강은 IT 융합에 의한 기술창조전략인 개척자 전략을 적용해야 하는 분야다. 반면,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높은 기술과 규제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5대 전략산업인 'MESIA', 즉 의료바이오, 에너지환경, 안전산업, 지적서비스, 항공우주산업에는 신기술로 인해 지배적인 기술패권이 변화되고 새로운 기술사상이 출현할 때 1등이 될 수 있도록 2등 전략인 추격자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 김원준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

### 경제전략

경제분야의 세 전략인 경제전략, 창업국가전략, 농업전략을 포괄하는 경제미래전략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GDP는 1995년에 1만 달러를 넘어섰고, 2010년에 2만 달러, 그리고 2015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500만 인구-3만 달러 클럽에 내년이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G7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이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적 체제나 구조가 변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성장할지, 정체할지, 쇠퇴할지는 지금 설정하는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미국은 GDP 5만 달러로 성장했고, 유럽은 3만 달러에서 정체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점차 복지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상황은, 기술이 포화되면서 그 효용이 소비자가 원하는 이상으로 제공되어 시장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30년 동안 유지해 온 이 전략보다는, 소셜커머스나 소셜 비즈니스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전략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기술 자체의 효용이 아닌 디자인에 집중하고, 소비자의 감성 중심으로 서비스의 새로운 모습을 풀어내야 한다. 또한 통일 시대의 경제를 준비하고, 고령·여성인구와 외국인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이들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 정치제도전략

정치란 본질적으로는 권력과 선택의 배분 문제다. 권력은 최소한의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데에서 생기며, 정치는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는 인간이 멋대로 행동하는 것에 어떻게 제약을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과 복잡한 인과관계가 있다. 사회에는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제도다. 상당한 비용이 주로 빈부격차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갈등 해결에 사용된다. 완벽히 해결은 하지 못하더라도, 갈등이 사회를 와해시키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와 갈등이 생겨나는 형태가 문제다. 우리나라는 갈등이 중첩되어 있어 정치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과거 30년 동안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행정부가 입법부에 종속적인 형태로 지내오다가, 민주주의 이후에 상당히 균형을 회복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다. 한국의 또 다른 특징은 활발한 시민사회다.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표출하는 시민집단이 있다. 그렇지만 소외된 집단도 많다. 과거 행정부는 지시 위주의 기관이었지만, 이제는 사회 각 구조와 협업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은 일종의 와일드 카드로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사건이다. 그러나 통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인구전략

미래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견인하는 특징은 네 가지다. 첫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우리나라 인구가 현상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2명에 한참 미달한다. 둘째, 지역 간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편차와 농촌의 고령 인구 증가 추세는 미래로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셋째, 빠른 고령화 속도다. 1985년대 인구구조 형태는 젊은 층이 더 많은 피라미드 형태였지만 지금은 점차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고령층이 더 많은 역 피라미드 형태가 되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206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되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끝으로 외국인들의 꾸준한 유입이라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를 넘어 본격적인 이민사회로 향하는 중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들이 가져올 문제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저하, 고령자 수가 증가함에 따르는 보험 같은 사회비용지출의 증가, 일자리와 연금을 둘러싼 노인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갈등, 부양 문제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러나 기회의 측면도 있다. 외국인 유입은 내수시장과 세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인종의 융합을 통해 창발적 시너지효과를 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구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탄력적인 적응이다. 대응이란 바꾸기 위한 노력을 뜻하며, 적응은 시류에 편승하는 전략이다. 이를테면 대응은 출산율 제고를 통해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적응은 인구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기조로의 전환과, 자율적이고 순환적인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 전략을 들 수 있다. 적응에는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며, 적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지연에 대한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SI**

\*본 글은 10월 7일 개최된 KAIST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소센터 주최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